

News

'은행빚 탕감법' 정부도 우려... "재산권 침해 · 은행 건전성 우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재산권 침해와 건전성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밝힘.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

"고신용자 대출 인뱅, 취지 부합 못 해...5월 방안 발표"

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당초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설 취지와 달리 중신용자들의 대출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

농협은행, 4대은행 제치고 정기예금 시장 선두 '기염'

데일리안

NH농협은행이 국내 4대 시중은행을 모두 제치고 정기예금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 제로금리 속에서도 1%대 금리를 지켜내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는 분석

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31조8329억원으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밀어내며 선두로 올라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929억원 늘어 은행들 중 유일하게 130조원대를 유지

작년에도 신용대출의 절반 이상은 14% 넘는 고금리였다

한겨레

5년 전 정부의 금리 10% 안팎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에도 금융권의 비협조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지난해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건수 중 연 14% 이상 고금리 대출이 절반 이상인 54.4%

이에 금융위는 25일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 없이 공급되던 사잇돌대출을 개선. 앞으로는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

증권사 불완전판매 칼 빼든 금감원... '듣보기 검사' 나선다

비즈니스워치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 행위 점검을 강화.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 지속으로 투자자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종점 검사사항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잠재리스크 관리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3월 기업 자금조달 24조4천억... 주식 발행 전월 대비 780% ↑

데일리안

3월 주식과 회사채 시장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가 한 달 전보다 22% 증가 특히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700%p 이상 급증

국내 기업의 3월 주식과 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24조4186억원으로 집계. 전월 대비 22.3% 증가

마이데이터 2차 심사 시작... 심사중단제도 개선은 숙제

아시아경제

금융당국이 오는 8월 시행이 예정돼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2차 허가 심사를 재개. 최대 변수로 꼽히는 심사중단제도 개선은 여전히 논의

2차 심사에 교보생명, 기업은행 LG CNS, 등 31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6개 신청인이 곧장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

5월 3일 재개 앞두고, 개인 투자자 4,000명 '공매도 교육' 수강했다

서울경제

다음 달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를 위해 사전 교육을 받은 개인 투자자가 4,000명

지난해 2월 기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곳에 불과. 이에 금융 당국은 대주 가능한 증권사를 총 28곳으로 늘려 대주 취급액을 2조 4000억원까지 끌어올릴 방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